

제7회 동시지방선거 성북지역 입후보자들에게 드리는

#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2018. 6. 1

6·13 성북내일

(성북지역 51개 시민사회단체)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들의 건투를  
빕니다.

지방분권의 시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이번 선거에서 성북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사  
회적 가치추구를 위한 올바른 지방정부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야별 정책제안을 각 당의 모든 후보  
들에게 전달합니다.

성북의 지방정치가 한단계 성장하기를 바라는 주권자  
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깨끗한 정  
치, 성북의 발전을 위해 출마하신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613 성북내일>은 선거과정 뿐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매니페스토 실천활동과 민·관 교류의 장으로서  
건강한 시민정치, 지역정치의 씨앗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북을 만들기 위해 주민, 의회, 행정  
이 함께 협치와 자치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 6·13 성북내일

(성북지역 51개 시민사회단체)

## 6.13 성북내일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가나다순 정렬

### ○ 연합단위(4곳)

연번	단체명
1	공유성북원탁회의
2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3	성북마을예술창작소네트워크
4	협치성북시민협의회

### ○ 개별단위(47곳)

연번	단체명
1	(가)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	(유)노란들판 사회적기업
3	(주)아이앰퓨처 사회적기업
4	(주)K2인터내셔널코리아 사회적기업
5	(주)디올연구소 사회적기업
6	(주)땡큐플레이트 사회적기업
7	(주)소사이어티알렙 사회적기업
8	(주)스플 사회적기업
9	(주)아츠컴퍼니뜨락 사회적기업
10	(주)아트그룹 슈필렌
11	(주)아트버스킹 사회적기업
12	(주)옴엔터테인먼트 사회적기업
13	(주)위시루프컴퍼니 사회적기업
14	(주)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 사회적기업
15	(주)히든북
16	강북신용협동조합
17	교육공간 민들레
18	국민대학교생활협동조합
19	길음예술사랑방

연번	단체명
20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21	따보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22	마을은예술 협동조합
23	명상나눔협동조합
24	문화도시연구소
25	브릿지협동조합
26	생협정릉마을모임
27	서울북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28	서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성북지부)
29	성북공동육아협동조합
30	성북동천
31	성북마을살이연구회
32	성북신용협동조합
33	자문자답
34	장위신용협동조합
35	정릉신용협동조합
36	커리어코칭 사회적협동조합
37	타래
38	한국교사강사연합회협동조합
39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북동지부
40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41	해맑은주택협동조합
42	행복한정릉창작소
43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44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45	협동조합 성북나눔돌봄센터
46	협동조합성북신나
47	협동조합에듀닥터바른배움

# 정책제안서 회신 안내

---

## 회신방식

- 각 분야별 정책제안서를 검토하신 후,
- | 찬성: 찬성에 (0)표시하고 실행의견을 서술 합니다.
  - | 반대: 반대에 (0)표시하고 반대의견을 서술 합니다.

## 회신활용

회신을 보내주신 후보 명단을 페이스북과 성북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후보들의 실행의견과 반대의견 전문을 게재하여 이번 선거가 정책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합니다.

- | 6·13 성북내일 페이스북 페이지: <http://fb.com/seongbuk.naeil/>
- | 성북마을 홈페이지: <http://sbnet.or.kr>

## 회신방법

- | 메일회신: 6.13 성북내일 공식메일 [seongbuk.naeil@gmail.com](mailto:seongbuk.naeil@gmail.com) 으로 회신내용을 보내주십시오.
- | 문자회신: 정책제안서에 수기로 작성하신 후 아래의 문의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선거사무실 내방하여 수령하겠습니다.
- | 문 의: 6·13성북내일 010-2397-6789

## 추후일정

### 6.13 성북내일과 함께하는 <시민제안 정책 간담회>

- | 일시: 2018년 6월 8일(금) 오후 1시
- | 장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 목차

---

<b>분야별 시민사회 정책 제안</b>	7
마을공동체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7
사회적기업 · 지역자원 순환을 위한 시스템과 워크스페이스 구축	9
협동조합 ·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정책 _ 즐거운 협동생활! 안전한 마을살이!	11
사회적경제교육 ·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13
공공자산위탁 ·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경영	15
주민자치 · 주민주도의 진정한 주민자치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17
장애 분야① · 장애인 온라인 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한 ONE-STOP 서비스 구현	19
장애 분야② · 성북구내 유휴시설 및 공간 시설 활용을 통해 장애아동 24시간 돌봄 시설 확보	21
돌봄 · 돌봄 종사자(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불법적, 불합리한 처우 개선	23
노인복지 ·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도의 정책 추진	25
문화예술① · 지역 주민과 예술가 중심의 문화예술 협치 기반 강화 및 확장	28
문화예술② · 공유, 자치, 시민자산화의 관점에 기반한 지역문화시설 및 공간 운영	30
청년 · 청년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성있는 조직 신설	32
여성 · 여성에게 안전한 월경권 (공공생리대 제공) 보장	34
환경 ·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36

# 마을공동체 시민사회 정책 제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북/노원/도봉/성북 등 동북 4개구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총 52개, 이 가운데 성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임/단체가 42개 입니다. (2018년 5월 25일 현재 기준)</li> <li>• 서울 전역에서도 활동의 양적/질적 규모가 단연코 압도적인 지역이지만, 민간 차원의 미디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없는 실정입니다.</li> <li>• 성북구는 자치구 차원의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설립한 몇 안되는 곳이지만, 구청 직영으로 운영중인 센터는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어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마을미디어 활동 단체들의 입장입니다.</li> <li>• 성북의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난 2012년부터 활동이 시작된 이래 6년의 시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역공론장 조성의 주체로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한편, 주민들이 거주/생활 지역에 대해 관심 갖고 다채로운 자원활동과 취미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며, 아직은 소소하지만 지역형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li> <li>• <u>그 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되어온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u></li> </ul>
정책 요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주도의 자율적·독립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보장 및 장려</li> <li>• 자치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 및 발전방안 모색, 미디어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완비</li> <li>•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확립</li> <li>- (가칭) 성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중심의 안정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갈등 상황을 민간 자체의 역량으로 관리하고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li> <li>● 활성화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유통함으로써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li> <li>● 주민들의 일상과 생활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들이 미디어를 통해 기록됨으로써 지역의 대표적인 아카이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비 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 고 :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고양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답 변〉</p>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찬 성</p>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반 대</p>
<p style="margin: 0;">〈찬성이유 및 이행방안〉</p>	<p style="margin: 0;">〈반대이유〉</p>

## 사회적기업 시민사회 정책 제안

지역자원 순환을 위한 시스템과 워크스페이스 구축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은 환경/자원순환과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습니다.</li> <li>• 성북에 있는 수많은 마을 사회적경제 단체와 모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li> <li>• <u>예산의 한계와 지역기반형 조직이 갖는 연대와 조직화의 열악함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한계점에 봉착해 있습니다.</u></li> <li>•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는 전문 커뮤니티 포털이 필요합니다.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직접적 실천센터가 아니라 실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셋업시키는 지원기관입니다. 제안하는 전문 커뮤니티 포털은 <u>실제로서 각자의 목적에 맞는 실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u></li> </ul>
정책 요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환경/자원순환과 융합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b> : 온오프라인 포털을 구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허브 공간을 구축하여 조직과 단체, 모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li> <li>• <b>직접 실천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허브(work space hub) 구축</b> : 워크스페이스 허브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아이템을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지원센터보다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해야 합니다)</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공공서비스 분야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li> <li>- 커뮤니티 허브 구성(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비즈니스조직, 재생산조직, 재생산자)</li> <li>- 소식지를 통한 정보공유 체계(온라인과 오프라인 매거진과 커뮤니티 소식지 이슈 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벤트, 프리전시대회, 프리마켓 활성화, 클라우드펀딩 이벤트 등을 실시</li> <li>● 수익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합니다.</li> <li>-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그룹별 조직망 구축. (개인그룹, 비즈니스그룹, 재능기부그룹, 사회적경제그룹)</li> <li>- 비즈니스 그룹의 적극적 생산을 위한 스킬-트레이닝 교육. (교육Learning→훈련Training→생산Remaker/Restarter)</li> <li>- 비즈니스 그룹별 교육 대상. (취약계층, 재창업자, 청년창업가, 사회적경제기업가)</li> <li>-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Business Venture)으로 창업 유도.</li> </ul>
--	---

〈답 변〉	
찬 성	반 대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

# 협동조합 시민사회 정책 제안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정책 _ 즐거운 협동생활! 안전한 마을살이!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구 협동조합 설립 현황(2017.12.31. 기준) : 110개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협동조합 97개, 사회적협동조합 12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개</li> <li>※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별도(소비자생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li> <li>- 약 60%의 협동조합만 사업 운영 중으로 파약, 교육서비스업 및 예술스포츠분야의 비중 높음</li> <li>- 정책수요 : 판로지원이 약 50%로 가장 크며 금융인프라 확보와 협동조합 전문가 육성, 협동조합 간 연대사업 촉진 등으로 파약</li> </ul> </li> <li>●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현황 : 16개 회원(일반 7개, 사회적협동조합 1개, 생협 4개, 신협 4개)</li> <li>● 현안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운영, 연대사업 등 단계별 종합적이고 실질적 지원시스템 부재</li> <li>- 공공사업 진출, 자금조달의 높은 장벽</li> <li>- 협동조합의 가치와 다른 경제조직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li> <li>- 법적, 제도적 뒷받침 미흡</li> </ul> </li> </ul>
정책 요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효성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 5px 0;"><b>'협동조합 One-Stop 지원센터' 설립</b></div> <p>제도, 공간, 사람, 자금 등 조직 운영 전반에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p> </li> <li>● 공공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설립 및 진출 지원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 5px 0;"><b>'지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b></div> <p>주민 삶에 밀착된 공공서비스(교육·문화·보건의료 등) 분야에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지원 - 우선 성북구 지역의료사협 설립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p> </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필요'를 주민의 '참여'로 해결하는 협동조합 가치 확산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합리적 문제해결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습, 나아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li> <li>• 공공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일시적/단절적 지역 활동이 아닌 연속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수행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li> </ul>
-------------	---

<b>&lt;답 변&gt;</b>	
<b>찬 성</b>	<b>반 대</b>
<b>&lt;찬성이유 및 이행방안&gt;</b>	<b>&lt;반대이유&gt;</b>

# 사회적경제 교육 시민사회 정책 제안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 경제 교육 확대	
<b>제안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사회적경제’인가에 대한 인식 확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및 제도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임</li> <li>●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 종사자 외 일반대중 대부분은 사회적경제 개념 및 이해 부족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실행에 차이가 큼</li> <li>●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경제 인식 저변확대 방안이 절실함</li> <li>● 초·중·고등학생 및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확산 계기 필요가 있음.</li> </ul>
<b>정책 요구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를 위한 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학 공동 기획 커리큘럼 개발(교육청연계)</li> <li>-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 편성 시 사회적 경제교육 의무화(평생교육과정 등)</li> <li>- 사회적경제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li> </ul> </li> <li>●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확대(교육청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협동의 가치 및 올바른 경제관을 배우고 경험하게 함</li> <li>- 초·중·고학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커리큘럼 개발 및 초·중·고 학생 대상의 사회적경제 교육 및 동아리 활성화(자유학기제 활용, 학교협동조합 등 연계)</li> </ul> </li> <li>● 공무원대상 연2회 사회적경제 교육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인식변화 계기 마련</li> <li>- 공공구매시장에서 사회적가치 반영에 적극적 역할 필요</li> </ul> </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경우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교육시스템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배려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가치관 형성.</li> <li>● 시민과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생활패턴의 변화와 공직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음.</li> </ul>

---

〈답 변〉	
찬 성	반 대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

# 공공자산 위탁 시민사회 정책 제안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경영	
<b>제안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에 존재하지만 활용도가 낮은 유휴 공간 등 공공자산을 주민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li> <li>•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지역 내에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나 적절한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에 주변지역을 전반적으로 쇠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li> <li>• 지역활성화와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유휴 공공자산을 관리 및 활용하는 정책방안이 필요</li> <li>•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이 필요한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 지원 가능</li> </ul>
<b>정책 요구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 및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유휴공간 등의 공공자산을 지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위탁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공공성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조직 또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게 구청이나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산 중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위탁하여 관리</li> <li>• 자산의 위탁비용은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화하거나,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무상대부 등으로 책정</li> <li>• 공공자산의 위탁을 받은 조직은 주민과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공유자산 공동체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관리·운영</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휴공간 등 공공자산을 위탁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반으로 활용</li> <li>• 위탁관리를 통해 행정의 유휴공간 관리 부담을 낮추고, 주민전체에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채널로 생산적으로 활용</li> </ul>

---

〈답 변〉	
찬 성	반 대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

## 주민자치 시민사회 정책 제안

주민주도의 진정한 주민자치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서울시는 2017년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 26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을 필두로, 올해 13개구 65개 동에서 확대 시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서울시에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li> <li>● 성북구는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초,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의회와의 부침을 겪으면서 합의해지에 이르게 되어 2018년 5월부터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은 구청 직접사업으로 진행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li> <li>● 자치구 직영이라는 이례적인 조건 아래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이 자칫 관주도형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성북의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세심한 지원과 노력이 요구됩니다.</li> </ul>
정책 요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주도의 진정한 주민자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회가 관료화되지 않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속도에 맞추는 세심한 지원 계획 수립</li> <li>- 다양한 주민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를 간파하고 의견차이나 욕구의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소통체계 확보</li> <li>- 각 동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지원이 가능한 융통성과 주민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li> </ul> </li> <li>● 주민자치센터와 조례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이후(마을생태계와 주민자치가 결합한 주민자치센터)를 설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내 공감대 형성</li> <li>-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이후 모습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민,관 협의 테이블 구성</li> <li>- 준비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지원센터와 조례 마련</li> </ul> </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단위 자치분권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삶과 관련된 생활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주도의 자치를 경험하고 지방분권의 토대를 마련</li> </ul> </li> <li>● 마을생태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안에서 경제활동, 돌봄, 도시재생,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안전한 마을로 마을생태계 구축기반 마련</li> </ul> </li> <li>● 주민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의 조기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동의 경험이 성북구 전동으로 확대시행 되는 시점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가 확대될 수 있는 기틀 마련</li> </ul> </li> </ul>
-------------	--

<b>&lt;답 변&gt;</b>	
<b>찬 성</b>	<b>반 대</b>
<b>&lt;찬성이유 및 이행방안&gt;</b>	<b>&lt;반대이유&gt;</b>

## 장애 분야 ① 시민사회 정책 제안

장애인 온라인 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한 ONE-STOP 서비스 구현	
<b>제안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단체별로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의 제한, 검색 불편, 홈페이지 유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실시간 업그레이드 등 많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li> <li>● 또한 장애인 관련 정부정책, 법률 및 유권해석, 분쟁사례, 의료지원 등 공식적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장애인 단체, 개인간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포털사이트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li> <li>●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사공간적 제약을 가진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인 포털사이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li> </ul>
<b>정책 요구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포털 온라인 사이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정책, 법률, 주요사항 게시 배너 등 운용</li> </ul> </li> <li>● 각 장애인 단체별로 현재 운용 되는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와 링크 되도록 시스템 구축</li> <li>● 쌍방향 의사 교환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자(공공기관)가 정책 시행전 의견 수렴을 위한 게시 및 장애인 단체, 개인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li> </ul> </li> <li>● 장애인 단체, 개인간 의견 교환, 알림 사항 등 개진을 위한 커뮤니티 배너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시설, 불편 사례, 장비 구입, 식품 등 다양한 의견 교환 및 불편 사항 등 교환</li> </ul> </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이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대표성, 공공성, 공익성, 장애인들의 편의성 증대와 공적기관으로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기여</li> <li>● 개별 단체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통합을 통한 장애인 및 관련자들이 검증된 정보 획득과 공유를 쉽게 할 수 있어 장애인, 단체들에게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적시성 있는 도움이 됨</li> </ul>

---

〈답 변〉	
찬 성	반 대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

## 장애 분야 ② 시민사회 정책 제안

성북구내 유희시설 및 공단 시설 활용을 통해 장애아동 24시간 돌봄 시설 확보	
<b>제안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은 성북구 시설관리공단 길음환승주차장 건물 7층 일부를 임대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li> <li>• 일반 상업시설 용도이다 보니 휠체어와 활동보조인, 일반인들과 함께 타기에는 협소한 엘리베이터, 화장실, 출입문 등 장애인에게는 부적합한 시설 등 장애인 이용자들의 불편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입니다.</li> <li>• 장애인 전용시설이 아닌 공간의 한계로 인해 실재 활동에만 구한된 프로그램 운영, 일반인들과의 갈등상황 발생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에서 야간돌봄(24시간)까지 돌봄에 대한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li> </ul>
<b>정책 요구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구내 유희시설 또는 구청이 관리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24시간 주·야간 장애인을 위한 전용 시설로 활용 할 수 있는 시설 확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안 : 길음 뉴타운내 서울시 소유(현재 일부만 사용중)의 건물에 대한 일정 공간 사용권(유상, 무상사용)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인도해 준다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지역주민, 동 시설의 목적, 현재 빈 공간의 활용성 증대, 유상 사용시 사용료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 줌으로써 실질적 도움 단일 건물로서 장애인 전용 시설로 등록 및 운용 용이</li> <li>- 2안 : 장애인 전용 시설을 위한 건물 신축 및 성북구내 유희시설 확보하여 장애인 돌봄을 위한 시설로 제공</li> </ul> </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돌봄을 위한 전용 시설 확보를 통한 장애인 및 관련자(부모 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적 향상과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사회적 요구(24시간 돌봄)에 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li> </ul>

〈답 변〉	
찬 성	반 대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

## 돌봄 시민사회 정책 제안

돌봄 종사자(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불법적, 불합리한 처우 개선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종사자들은 같은 돌봄 분야 안에서도 급여체계가 다르고(아이돌봄: 7,800원, 장애인돌봄: 10,000원) 4대보험가입 및 퇴직금이 적립되는 <u>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u></li> <li>• 특히 아이돌봄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구가 1/3씩 예산을 매칭하고 있는데 단 한 차례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18년 2월 전국 아이돌보미 1,300여명이 국가와 자치구 센터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li> <li>• 지역사회 내 가족기능 강화 측면에서 돌봄은 그 중요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 세대 뿐 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자치구와 국가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정비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건강한 돌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li> <li>• <u>돌봄 종사자들에게 전문성은 요구하면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봉사정신만을 강조한다면 종사자들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일터에서 이탈되는 현상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u></li> </ul>
정책 요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돌봄 조례 제정 요청</li> <li>• 성북구 돌봄 종사자들의 현황과 처우를 비교, 분석해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청(교통비, 복지수당 등)</li> <li>• 기관돌봄/방문돌봄, 대상별 돌봄(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각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종사자 스트레스 개선교육, 위탁시스템 개선 등)</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분야 종사자들의 자존감 및 전문성 강화</li> <li>• 가족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기능</li> <li>• 영역별 돌봄 네트워크 구성으로 인적자원 및 정보공유 강화, 현장성을 띤 실질적인 정책제안 가능</li> </ul>

<b>비 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6만 가구' 아이 돌보미...서비스 중단 위기(2018. 05.22)</li> <li>- <a href="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653265">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653265</a></li> <li>-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역시 수당지급을 피하기 위해 단시간 돌봄을 하거나 교통비 지급도 안 돼 지속적, 전문적인 돌봄 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li> </ul>
------------	---

〈답 변〉	
찬 성	반 대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

# 노인복지 시민사회 정책 제안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도의 정책 추진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수혜 과정이 복잡하며 여러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수혜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받기 어렵고 행정의 복잡도로 인해 만족도가 낮습니다. 수혜자 선정기준이 복잡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가 차등화 되어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u>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원화되고 이용자의 욕구도 다양해지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조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u></li> <li>• 현재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지나친 표준화와 획일성으로 인해 개인별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u>연령, 질환, 경제력 등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접근이 필요합니다.</u> 의료, 돌봄 뿐 아니라 영양지원, 이동지원, 문화 및 사회성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구 차원에서 의 안정적인 지원책이 부족합니다.</li> <li>• 노인복지서비스의 수가가 최소 인건비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익성 확보 문제를 야기하고, 서비스의 질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u>노인대상 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u></li> <li>• 성북구내 사회적경제는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회적경제조직내 소셜 미션으로 내재화 되어 있어 개인별 서비스의 마진이 넓고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u>노인복지를 소셜 미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와의 정책사업이 부재로 인해 기회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u></li> </ul>
정책 요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제도 정책화</li> <li>• 수요자별 필요에 맞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li> <li>• 맞춤형 노인복지 기획/실행/관리하는 <u>케어매니지먼트 체계(비고 참조) 구축</u></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복지를 실행함으로써 보다 진화한 선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li> <li>●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마진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li> <li>● 맞춤형 노인복지 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li> </ul>
<p><b>비 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 필요</li> <li>- 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통합 적 재가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등)”,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 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제안함</li> <li>- 또한, 케어매니지먼트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등급 판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중장기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 및 자원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의 일환으로 기능”)</li> <li>- 이와 같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재편 방향에 맞추어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시스템의 개발을 선도하고,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한 적용 개발 및 문제점 검토 등 필요함</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답 변&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찬 성</b></p>	<p style="text-align: center;"><b>반 대</b></p>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

## 문화예술 ① 시민사회 정책 제안

지역 주민과 예술가 중심의 문화예술 협치 기반 강화 및 확장	
<b>제안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사회적 통제가 부재한 행정 관료 중심의 문화예술정책 환경이 어떻게 문화예술생태계를 파괴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li> <li>●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한국 사회의 변화는 지역의 문화예술정책 환경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협치의 확대와 강화는 시대적 요구입니다.</li> <li>● 성북구의 경우 지난 민선5, 6기 구정을 통해 문화협치의 기반과 토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공유성북원탁회의로 이어져왔습니다.</li> <li>● 하지만 이러한 사례와 경험이 문화예술 협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민선7기 성북구 구정에서 토대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li> </ul>
<b>정책 요구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 참여 확대</li> <li>- 의제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li> <li>- 연도별 활동 공유회 및 보고서 제작 등 문화협치 활동을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와 적극적으로 공유</li> </ul> </li> <li>● 성북문화재단 운영의 협치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문화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 참여 보장</li> <li>- 지역문화협치를 담당하는 개방형 본부장 직제 추가 신설</li> <li>- 성북문화재단 내 (가칭)지역문화협치위원회 설치</li> </ul> </li> <li>● 지역 문화예술 협치 주체의 발굴과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제도 수립</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적 지역 주체를 발굴하고 문화민주주의의 토대 구축</li> <li>● 지역 문화예술 주체와의 협력 구조 마련을 통해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창조문화도시 성북의 위상 강화</li> <li>● 지역 현장과 밀착한 새로운 문화예술행정 구축으로 지역문화생태계 강화</li> </ul>

---

〈답 변〉	
찬 성	반 대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

## 문화예술 ② 시민사회 정책 제안

공유, 자치, 시민자산화의 관점에 기반한 지역문화시설 및 공간 운영	
<b>제안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서관, 박물관을 제외한 문화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에 속하며 민선 5,6기 구정에서 문화시설의 유치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li> <li>• 현재 성북동 연극몰, 길음 문화복합시설, 정릉 시인의 마을 등 대규모 문화시설이 설립 될 예정이며, 이러한 문화시설들을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문화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li> <li>•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동선동 고가(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의 '미인도', 성북정보도서관 내 '천장산우화극장' 등 성북문화재단 위탁운영 시설의 일부를 협치형 운영을 통해 공유와 자치, 시민자산화에 기반한 새로운 운영모델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li> </ul>
<b>정책 요구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시 문화영향평가 실시</li> <li>• 공공성과 사회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시설 위탁운영 규정 및 평가 지표 개발</li> <li>• 지역문화시설 및 공간의 협치형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각 시설 운영 조례 등)</li> <li>•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강화</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문화시설 및 공간 운영의 시민 주도형 운영모델 개발과 운영 활성화</li> <li>• 지역의 문화시설 및 공간들이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생태계의 창조적 시민력이 발휘되는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li> <li>• 공간의 자율적, 창조적 운영을 통해 성북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li> </ul>

〈답 변〉	
찬 성	반 대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

## 청년 시민사회 정책 제안

청년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성있는 조직 신설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며 타 자치구들의 사례로 모색되고 있습니다.</li> <li>● 하지만 <u>청년정책은 다부서 사업으로 정보공유와 부서간 조정이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u> 현재 성북구 청년지원팀은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내에 3명의 인력이 있는 작은 팀입니다.</li> <li>● 서울시의 경우, 시장직속 사회혁신기획관을 신설하고 그 안에 청년정책담당관을 둬으로써 여러부서(일자리, 주거, 복지, 여성, 장애인, 진로 등)의 업무를 조정하고 신설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li> <li>● 특히 청년뉴딜일자리 사업은 성북구에서 100여명의 TO를 받아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수당 대상 역시 자치구별로 250여명에 달합니다.</li> <li>● 이를 위한 <u>서울시 중간지원조직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지만</u> 성북구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의 부재로 많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li> </ul>
정책 요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시민 담당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예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의 청년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중앙정부의 청년사업의 시범사업 등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담당관</li> </ul> </li> <li>● ‘성북청년시민허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사업이 시민들에게 잘 와닿을 수 있도록 조정, 홍보하는 역할과 서울시를 포함한 구 외의 지원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사업 진행</li> <li>- 정기적인 청년포럼 개최를 통해 청년시민들의 구체적 필요와 다양성을 심도있게 청취</li> </ul> </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 구민의 1/3를 차지하는 19~39세의 청년인구들에게 더욱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합니다.</li> <li>• 청년을 복지와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청년동정’, 청년을 미래의 신동력으로 보는 ‘청년신화’의 관점이 아닌 시민의 한 축으로 인식함으로써 기본권 확보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합니다.</li> </ul>
<b>비 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이슈 : 고려대 기숙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도전숙 입주대상자 확대 등</li> <li>- 일자리 이슈 : 뉴딜일자리 민간지원, 아르바이트 노동권, 성북형 청년수당 등</li> </ul> </li> </ul>

<b>&lt;답 변&gt;</b>	
<b>찬 성</b>	<b>반 대</b>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

## 여성 시민사회 정책 제안

여성에게 안전한 월경권 (공공생리대 제공) 보장	
<b>제안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은 생리기간동안 30~40개, 약 40년간 12,000여개의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7년간 생리대 가격이 140회나 인상되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의 3배 수준입니다.</li> <li>• 여성에게 월경은 선택할 수 없기에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이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인권의 문제,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권, 나아가 교육권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li> <li>•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미국 뉴욕시 의회는 2016년 공공기관 화장실 내 무상생리대 비치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li> <li>• 이렇듯 적어도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만큼은 어떤 여성도 불편하거나 수치심 없이 생리대를 쓸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생리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li> <li>•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여성인권과 건강권 등을 고려한 자치구별 월경 관련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li> </ul>
<b>정책 요구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리대를 필수품으로 인식하는 정책적 관점 정립</li> <li>• 학교와 보건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건강 전반 및 월경 교육을 통해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책 마련</li> <li>• 성북구내 모든 학교 및 공공기관 여성 화장실에 공공생리대 (긴급생리대) 비치</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층, 세대, 지역 등에 제한받지 않고 안전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 10대 여성을 포함한 여성 전반의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li> <li>• 월경과 여성의 몸에 대한 금기와 혐오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성북구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li> </ul>

〈답 변〉	
찬 성	반 대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

## 환경 시민사회 정책 제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서울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단연코 미세먼지일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성북구도 2017년 12월,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li> <li>● OECD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한해에 17,000명의 시민이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2060년이 되면 그 숫자가 52,000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li> <li>● 이렇듯 재난수준의 심각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책에만 의지하기보다는 <u>성북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밀한 진단과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u></li> <li>● 은밀한 살인자라 불릴만큼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u>원론적인 수준의 조례를 보완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u></li> <li>●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u>다양한 정보제공과 주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창구를 마련하여야 합니다.</u></li> </ul>
정책 요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민.관.학(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공론장 마련</li> <li>● 대규모 토목 공사 및 재개발 구역 공사로 인한 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li> <li>●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최소 횟수를 조례로 지정 (예 : 환경취약 계층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 경우 연간 4회 이상, 공연장 및 체육 시설 등은 연간 2회 이상 등)</li> <li>● 실내 공기질 관리 노력을 권장하기 위해 인증마크제 실시 (공기질 개선이 우수한 주민이용시설에 인증마크 부여 후 정기적인 점검으로 업데이트)</li> <li>● 주민을 대상으로한 미세먼지 대응 홍보, 교육 강화</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으로 하여금 성북구내 주요 건물(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li> <li>● 주민으로 하여금 아는 만큼 실천 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li> <li>● 학부모 등 관심이 높은 주민들과 정기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소통이 활발해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li> </ul>
-------------	--

<b>&lt;답 변&gt;</b>	
<b>찬 성</b>	<b>반 대</b>
<찬성이유 및 이행방안>	<반대이유>